

# 탄소중립 · 환경복지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민관 협력 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탄소중립 이행기반 확대와 환경복지 강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사진)은 22일 상반기 성과에 대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와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전북도는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자원순환 실천**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추진,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운곡습지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생태관광 기반을 강화했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정책 전방위 확산**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탄소중립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전북형 탄소중립 포럼'과 '이행협의체' 출범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6월 선포식을 갖고 환경교육

확산에 나섰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와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전북도는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자원순환 실천**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추진,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운곡습지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생태관광 기반을 강화했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정책 전방위 확산**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탄소중립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전북형 탄소중립 포럼'과 '이행협의체' 출범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문 11개소 설치, 하천변 진출입 차단 시설 42개소 설치 등으로 홍수 대응력을 강화했다.

**△산림복지 확대와 재해 대응**  
산림 분야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9개소 조성과 도시숲 72개소 조성을 통해 녹색 인프라를 확충했다. 상반기 전국적인 산불 발생 상황에서도 26건의 산불을 신속히 진화해 피해면적을 최소화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벽 72개소를 설치하고 임도 신설 및 보수도 병행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1,500ha 이상에 나무 338만 본을 식재하고, 숲가꾸기 6,500ha를 실시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  
전북자치도는 하반기에도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환경위해요인 상시 관리, 통합 물관리 체계 고도화, 산림복지 확대 등 다양한 환경·산림 정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소규모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 5인 이하 지점 중심 휴무제 운영... 사전 확인 필수

소규모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사전 안내 부족으로 무더위 속에서 발길을 돌리는 등 혼선을 겪고 있어, 보다 명확한 홍보와 시민들의 사전 확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 경원동의 한 시민은 최근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인근 경원동 우체국을 찾았으나, 점심시간에 방문한 탓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평소 은행은 점심에도 운영되니 당연히 우체국도 열려 있을 줄 알았다"며 "더운 날씨에 밖에서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6년 도입되어, 현재 전국 3,335개 우체국 중 약 1,865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직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지점을 중심으로, 12시부터 오후 1시, 12시30분부터 1시30분, 11시30분부터 12시30분, 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등 지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대형 우체국은 점심시간에도 일



부 민원 창구를 운영하지만, 소규모 지점은 점심시간 동안 창구 전체가 닫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체국 관계자는 "직원 수가 적은 우체국의 경우 점심시간에 전일 근무가 어렵고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과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가피하게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 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해당 지점의 점심 휴무시간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체국 홈페이지의 '우체국 찾기' 기능에서는 지점별 점심시간 휴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휴무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만호 기자

##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위한 정책세미나 열어

기후 위기 시대, 익산시가 재난안전산업 육성 목적과 과학적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학교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 위기와 도시화로 인해 재난 유형이 복합·다양해짐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재난 유형별 특화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과도 방향을 같이하며, 정부 정책에 발맞춘 논의의 장이 됐다. 해당 사업은 지진·화재·침수·급경사지 붕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및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박상진 박사가 맡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설립 방향 : (가칭)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기능으로 △진흥계획 수립 △인인증·표준화 △기업 지원 △판로 확대 등을 제안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적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행관 센터장이 '재난예측에서 대응까지 :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솔루션 및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나섰다. 이행관 센터장은 △인공지능(AI) 기반 현안 해결 지원 △도심 침수 예측 시스템 구축 현황 △지역중심 재난 대



익산시는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학교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응 전략 등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영춘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장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김용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실행 방안,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의 실질적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기반을 중심으로 산업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심사 실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

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심사를 실시한다.

새만금청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의 이익 등에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하고 조지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심사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소통24'(www.sotong.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온라인 국민심사 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단말기 과장 광고 주의 당부

### 전북자치도, 단말기 유통법 폐지 앞두고 가격정보 혼선 우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기 가격을 '공짜폰', '최저가' 등으로 과장 광고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판매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동일 단말기 모델도 매장별로 가격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한국소비자원 광주호 남지원, 전라남도과 공동으로 도내의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가격과 다른 '무료', '공짜' 광고 문구를 사용한 판매점이 10.2%(53곳),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표시한 사례도 1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부당광고 자체와 가격정보 제공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했으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는 39건으로, 같은 기간 39.3%나 급증했다.

서재영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계약 시 단말기 가격, 요금 할인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두 설명은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명 자료는 사진으로 남기거나 녹취해 두는 등 피해에 대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